

‘尹 탄핵·이진숙’ 등 연이은 청문회… 예고된 與野 격돌

법사위,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野, 거부권 무력화 상설특검 검토
與 “국회 규칙 입맛대로 바꿔”
野 “국정농단 그림자 짙게 드리워”
방통위원장, 국세청장,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달 열릴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첫번째)를 비롯한 야6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선 각종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동의)을 맞추는 데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 열리고 26일에 한 번 더 열린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다루고, 26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등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시 불참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

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법사위원장을 움직여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면서 “특검법을 발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고 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

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월 말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과거 보도 편향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전대, ‘네거티브 공세’ 과열… “元 오히려 고립 당해”

원희룡, 한동훈 ‘3대 의혹’ 공세에도
韓 지지율, 세 후보 합 뛰어넘는 45%
리스크 해결 안된 상태에서 역풍 맞아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원희룡 당 대표 후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2~3위를 달리는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오·의혹·실수 등 부정적인 면을 띄워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 검증’이라는 말과 결합돼 정당성을 얻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거나 현안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에게 지원 사격을 받

는 원희룡 후보는 본격적인 TV토론에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여론조성팀, 사천,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을 띄우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성팀을 꾸렸다는 것이고, 사천 의혹은 한 후보가 총선 때 한 후보측 인사들을 공천했다는 주장이다. 또, 원 후보는 한 후보 측인 김

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는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원 후보는 일주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당 안팎 지지율은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세 후보 지지율 합(30%)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이동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와 거리를 둔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원 후보와 친윤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보이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업고 하는 네거티브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를 폭로해 친윤계가 한 후보를 고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꾸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지지를 한 후보가 받아서 원 후보가 고립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전략은 이슈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계속적인 역풍을 부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비대면회의를 열고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등을 금지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않도록 노력”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7년 전 오 늘인 지난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

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000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공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두관, 중도층 공략 먹혔나…李 바짝 추격

李 지지율 44.9%, 김 37.8%

정치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예상 밖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이에 따라 8·18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 김두관 후보는 37.8%로 집계됐다.

이는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일극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풀이되며, 김 후보의 예상 박선전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까지다. 조사는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의 1인 정 당회를 비판하며 ‘다양성’과 ‘분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